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범시민사회 공동 워크숍



- 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일시: 2014년 10월 29일(수) 14:00 - 17:00
-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범시민사회 공동 워크숍

## 목 차

프로그램 .....	7
발표자료 .....	11
1.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의 활동과 환경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소개 .....	13
-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수립 동향과 세부 내용 .....	43
- 이성훈 (KCOC 정책센터장)	
참고자료 .....	49
SDG OWG 17차 회의 결과문서(2014.7.19.)의 한국월드비전 비공식번역본(초안) .....	51



프로그램

---



## 프로그램

사회 : 남부원(KoFID 운영위원장)

세션	시간	내용
인사	14:00 ~ 14:10 (10분)	워크샵 프로그램 안내 및 참가자 소개
1부	14:10 ~ 14:35 (25분)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의 활동과 환경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소개 - 박용신(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14:45 ~ 15:10 (25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수립 동향과 세부 내용 - 이성훈(KCOC 정책센터장)
2부	15:10 ~ 16:10 (60분)	새로운 개발목표와 한국 시민사회 활동의 연결고리 찾기 - 그룹토의 ★
종료	16:20 ~ 17:00 (40분)	종합 정리 및 마무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제별 그룹

그 룹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초안)		분 야	퍼실리테이터
경제·사회 발전	총괄	1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빈곤 근절	빈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10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의 완화	불평등	
	사회 발전	2	기아 해소,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 증진	식량/농업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
		3	모두의 건강한 삶의 보장, 모든 연령대의 인구의 복지 증진	보건/건강	
		4	양질의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교육	
		5	양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젠더	
		6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 보장	물과 위생	
	경제 발전	8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노동	한국YMCA 전국연맹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장려	경제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지 조성	주거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소비	
	환경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 보장	에너지	한국 환경회의
13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		
14		해양·바다, 해양자원의 보존	해양		
15		육지생태계, 삼림, 토지,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복원	환경		
거버넌스, 이행수단, 파트너십	16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거버넌스	참여연대	
	17	이행수단의 강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수단, 글로벌 파트너십		

## Post-2015/SDGs 관련 주요 사이트 안내

### 유엔 및 국제기관

- 1) [www.worldwewant2015.org](http://www.worldwewant2015.org)
- 2) [www.endpoverty2015.org](http://www.endpoverty2015.org) – UN Millennium Campaign
- 3) [www.post2015hlp.org/](http://www.post2015hlp.org/) - High-level Panel
- 4) [www.un.org/en/development/desa/policy/untaskteam\\_undf](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licy/untaskteam_undf)
- 5) [sustainabledevelopment.un.org](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 – OWG on SDGs
- 6) [www.myworld2015.org](http://www.myworld2015.org)
- 7) [www.uncsd2012.org/](http://www.uncsd2012.org/)

### 국제시민사회

- 1) [www.beyond2015.org](http://www.beyond2015.org)
- 2) [www.whiteband.org](http://www.whiteband.org) – GCAP
- 3) [www.socialwatch.org](http://www.socialwatch.org)
- 4) [www.civicus.org](http://www.civicus.org)
- 5) [www.csopartnership.org](http://www.csopartnership.org) – CPDE
- 6) [adaasia2015.org](http://adaasia2015.org) – ADA
- 7) [www.iisd.ca](http://www.iisd.ca)
- 8) [www.action2015.org/](http://www.action2015.org/) – action/2015 Campaign

### 국내 단체

- 1) [www.mofa.go.kr/trade/development/](http://www.mofa.go.kr/trade/development/) – 외교부 개발협력국
- 2) [www.odakorea.go.kr](http://www.odakorea.go.kr) – ODA Korea
- 3) [www.koica.go.kr](http://www.koica.go.kr)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4) [www.ngokcoc.org](http://www.ngokcoc.org)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5) [www.kofid.org](http://www.kofid.org)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6) [www.mdgkorea.org](http://www.mdgkorea.org)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
- 7) [www.odawatch.net](http://www.odawatch.net) – ODA Watch
- 8) [www.humanrights.or.kr](http://www.humanrights.or.kr) – 한국인권재단



발표자료

---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과 RIO+20한국민간위원회 활동소개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

## 1.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전통적인 의미의 지속가능발전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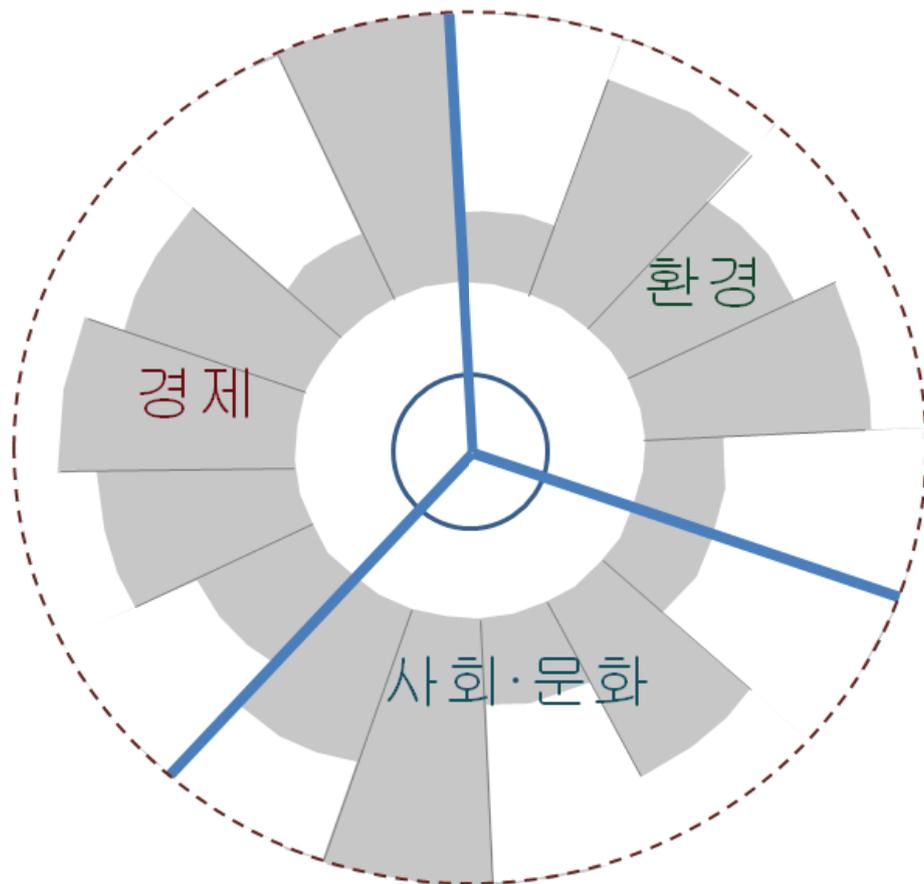


□발전된 형태의 지속가능발전 모델



- ▶ 환경은 삶의 터전, 수용능력의 한계로 이해되어야 함. 사회문화는 경제와 환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함
- ▶ 건전한 경제는 건전한 사회를 필요로 하고 이는 건강한 환경에 달려 있음.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경제, 환경 이슈의 통합 또는 융합이 필요함.
- ▶ 경제적 부, 행복, 성장 등과 관련한 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목표 재정의 및 재정립 필요.

□ 지속가능발전 평가 모델: 수레바퀴 모델



이 모델은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활용한 현황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모델

## 2. 한국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동향

### □ 서울의 지방의제

- 1992년 리우선언이후 한국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체 또는 조직체가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지방의제 21의 형태로 만들어졌음
- 서울시의 경우 민선 1기 조순시장의 발기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민선2기 고건시장 시기에는 대단히 활성화되었다가 난지도 골프장 건설문제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사퇴, 그리고 민선3기 이명박시장 시기에 청계천시민위원회를 계기로 서울시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다.
- 민선4기 오세훈 시장시기에는 그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녹색위는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보다는 환경분야 실천 거버넌스로 그 위상이 크게 후퇴하였다.
- 녹색위 내부에서도 지속가능거버넌스로 전환하고자하는 시도가 여럿이었으나, 행정의 무관심속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특히 2007년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으나, 해당법이 녹색성장기본법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조례조차도 폐기되었으며, 서울지속위는 발족도 하지 못한채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로 수렴되고 말았다.
- 그러나 출범한 녹색성장위원회도 제임기간동안 한두차례의 형식적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을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 2012년 녹색위8기 기간동안에 녹색위 발전 TF를 구성하여 서울시 지속위를 제안하였고 약 20여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말 서울지속위를 출범하였고, 현재 1기가 활동중이다.

### □ 전국의 지방의제 현황

-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의 지방의제도 리우선언이 이후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 최근은 아니지만, 2009년까지 전국의 248개 지방자치단체중 21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수립하였고,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는 219개이며 사무국까지 있는 조직은 113개에 이른다

- 서울연구원 이창우 선임연구위원의 평가에 의하면. 지방의제 21은 운동, 보고서, 계획의 세가지 성격이 있다. 운동측면에서 볼때 시민참여의 동력은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 측면에서 볼때 실질적인 수정보완이 없어 잊혀져가고 있다. 계획 측면에서 볼때 이행계획이 있고, 성과 평가와 환류 과정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시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한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제 21은 생활밀착형 단기성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 전국의 지방의제 21조직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재발의와 몇몇 선도적인 지자체의 모범에 따라 지속위로 전환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장재정법관련한 회계지침이 안행부에서 자치단체로 전달됨에 따라 근본적인 재정위기와 함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 □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후 지난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
-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
- 20년 단위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 5년 단위 국가이행계획과 지방이행계획 수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책임관 지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평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대통령보고, 국회 보고
-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의 활동소개

###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 조직 구성

#### 집행위원회 단체:

녹색미래, 녹색연합, ReDI, 생명의숲, 생태지평, 시민환경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KoFID,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참가 단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너름, 녹색교통, 발암물질국민행동, 여성단체연합, ODA Watch, 참여연대, 푸른아시아, 한국인권재단

#### 공동대표:

남미정(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부원(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지영선(환경운동연합 대표)  
최열(환경재단 대표)

공동집행위원장: 박용신(환경정의), 김혜정(환경운동연합)

공동사무국: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ReDI

#### 이슈 소위:

- Food Security: 너름
- Water: 환경정의
- Energy: 환경운동연합
- Cities: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Green Jobs-Social Inclusion: 한국노총
- Oceans and SIDS: 환경운동연합
- Natural Disasters: 녹색미래
- Climate Change: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Forests, Biodiversity, Land Degradation and Desertification: 생명의숲, 푸른아시아
- Mountains: 녹색연합
- Chemicals and Waste: 발암물질네트워크, 자원순환사회연대
- Education: 한국YMCA전국연맹
- Gender Equality: 여성환경연대
-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Financing(\*): ReDI
- Indicator(\*): 시민환경연구소

## ◆경과 보고

- 2011년 9월30일 한국 시민사회 리우+20 대응 위한 첫 모임
- 2011년 10월17일-20일 서울서 개최된 리우+20 아태지역 준비회의 및 메이저그룹 사전회의 참석
- 2011년 10월31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리우+20한국민간단체준비모임' 구성
- 2011년 11월7일 정래권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환경국장 간담회
- 2011년 11월8일 Avilash Roul, NGO Forum on ADB 사무처장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강연 개최
- 2011년 11월25일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위원장 '리우+10한국민간위원회' 발표
- 2011년 11월26일-12월1일 부산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및 세계시민사회포럼 참석
- 2011년 12월8일 KoFID 이성훈 위원장 부산 HLF-4 결과 보고
- 2011년 12월8일-2012년 5월31일 리우+20 문서 강독 프로그램 총 15회 개최
- 2011년 12월19일 리우+20한국민간단체준비모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주최  
'리우+20, 한국민간단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2012년 2월1일 Henri Valot CIVICUS 국장 간담회
- 2012년 2월8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준)' 구성
- 2012년 2월16일 손성환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간담회
- 2012년 2월23일 환경부 리우+20 준비팀 간담회
- 2012년 2월28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준) 1차 집행위원회
- 2012년 3월15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준) 2차 집행위원회
- 2012년 3월22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2012년 3월22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주최 1차 워크숍 '리우+20의 의미 및 쟁점' 개최
- 2012년 4월6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3차 집행위원회
- 2012년 4월19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주최  
2차 워크숍 '리우+20 이슈별 주제 발표' 개최
- 2012년 4월24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4차 집행위원회
- 2012년 5월8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5차 집행위원회
- 2012년 5월18일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간담회
- 2012년 5월21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주최  
3차 워크숍 '리우+20 의제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개최
- 2012년 5월22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6차 집행위원회
- 2012년 6월1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현지 참가단 준비 모임
- 2012년 6월14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참가단 리우로 출발
- 2012년 6월14일, 20일, 23일, 24일 1차~4차 현지 보도자료 배포
- 2012년 6월17일, 19일, 21일 현지 브리핑 3회
- 2012년 6월18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공동주최  
'Green Growth? The Future They Want!' 현지 국제심포지엄 개최
- 2012년 6월20일 People's Summit 리우 거리행진 참가
- 2012년 6월21일 리우+20 회의장내 국제시민사회 공동 액션 참가
- 2012년 7월11일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평가토론회

## ◆활동 계획

### ▷활동 방향

-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지 행사 참가 자체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대응
- 국내 시민사회에 리우+20에 대한 사전 분위기 조성
- 환경뿐만 아니라 개발, 여성, 노동 등 각 분과가 서로 협력해 9개 주요 그룹을 포괄하는 형태로 활동
- 환경, 경제, 사회가 균형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지방의제와 적극적인 연대로 지역 단위 논의 발굴에 힘쓸 것
- 4대강사업과 핵발전을 수출하려는 한국 정부식 '녹색성장'론 비판
- 리우+20 의제인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발표

### ▷활동 계획

-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 리우 현지 참가단 조직
  - 리우+20에 참가하려는 한국 시민사회의 플랫폼 역할
- 리우+20 문서 강독 프로그램 진행
  - 리우+20와 관련된 주요 문서들을 원문으로 강독
  - 2011년 12월8일 첫 진행 이후 2012년 5월31일 현재까지 총 15회 개최
  - 시민 참여 가능한 형태로 운영해 옴
  - 국제사회의 리우+20 논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
- 리우+20 주요 문서 번역
  - 리우+20과 관련된 주요 영문 문서들을 우선순위대로 한글로 번역
  - 시민사회 단체 및 시민들과 자료 공유
- 워크숍 개최
  - 국내 시민사회에 리우+20에 대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해도를 높임
  - 리우 회의에서의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민간단체의 입장정리
  - 1차: 리우+20 의미와 쟁점
  - 2차: 이슈 소위별 주제 발표
  - 3차: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평가
  - 4차: 리우+20 의제에 대한 입장정리(녹색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 5차: 리우+20 본 회의 참가 이후 활동을 정리
- 국제 공동행동의 날
  - 리우 회의에 즈음하여 전세계 NGO와 공동 퍼포먼스 진행

○국제연대

-리우 현지의 NGO네트워크와 그린피스, 지구의벗, CJN 등 국제 NGO와 국제연대 추진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현지 활동

-리우+20 의제인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에 대한 입장 발표

-리우+20 선언문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이 담긴 포지션 페이퍼 작성

-포지션 페이퍼에는 리우+20 의제 그리고 총 15개 주제별 영역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코멘트가 담길 것

-주제별 영역에 대해서는 리우+20 한국 민간위의 이슈 소위가 2차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될 것

-리우+20 한국 민간위 현지 참가단을 위한 일일브리핑

-리우+20 한국 민간위 활동을 홍보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부스 운영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 홍보 및 자료 발간

-리우+20 한국 민간위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

-리우+20 주요 문서 한글 번역물을 하나로 정리해 공유

-리우+20 본 회의 참가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해 공유

##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리우 현지 활동

### 1. NGO 그룹 전략회의 참여

-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본회의 개최전인 6월 17일(일)부터 본회가 끝나는 6월 22일(금)까지 9개 Major Group 중 NGO, 여성, 농민 그룹이 개최하는 아침 합동 브리핑과 별도의 NGO 그룹 브리핑 및 전략회의에 매일 참석하여 NGO 그룹 본회의 대응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NGO 그룹 전략회의는 NGO 그룹의 세계 조직 파트너 단체인, CIVICUS, Consumer International, ANPED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음.

### 2. People's Summit 참가

- 민간위는 세계 각국의 NGO, 농민, 여성, 원주민을 중심으로 리우 플라멩고 해변에서 개최된 '공공재를 지키는 사회적 환경적 정의를 위한 민중회의'에도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People's Assembly 참석 및 6월 20일에 실시된 민중행진(People's March)에도 민간위 차원에서 참가하였음. 민간위는 민중행진을 통해 Rio+20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세계 시민사회 및 민중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녹색으로 분칠된 ‘회색 성장’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세계 시민사회에 전달하고 행진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민중들과 공유하였음.



### 3.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 서명 참여

- NGO 그룹은 본회의 하루 전인 6월 18일에 NGO의 요청사항들이 대부분 누락되고 '합의를 미루기로 합의'하는 성격으로 리우+20의 최종 협상문이 채택되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The Future We Don't Want)'의 제목의 서명운동을 실시하였고 하루 동안 약 1,000여 명이 서명에 참가하였음.

<http://www.ipetitions.com/petition/the-future-we-dont-want/>

- 아래 서명문에서 보듯이 단체 서명을 한 전 세계 37개 단체 중 한국 민간위 소속 24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세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대표하는데 있어서 한국 민간위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음. NGO 그룹의 Organizing Partner였던 CIVICUS, Consumer International, ANPED 역시 한국 민간위의 협력에 큰 감사를 표시하였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

THE FUTURE WE DONT WANT

"Not with our agreement!!! Remove the "with ful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hat is stated in paragraph 1 of the official text.

We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social and justice movements who have responded to the call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participate in the Rio+20 process ? feel that the current state of negotiations severely threatens the future of all people and undermines the relevance and credibility of the United Nations.

After more than two years of intense negotiations and millions of dollars invested on the UN CSD 2012 Rio+20 conference, governments are unable and unwilling to reaffirm the commitments on fundamental principles they made in Rio in 1992.

Governments must realize that they receive their mandates from their citizenry people and that they must act in its best interest. They must

be imbued with a long-term vision, an environmentally-informed mind set, so as to guarante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vilizations and the best future for all, the future we all really want.

Although Governments are apparently unable to resiliently deal with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a problem confirmed in the G20 meeting in Mexico this weekend), we believe that this is the perfect moment, with potentially cathartic momentum, to embrace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This is not the time to abandon it on grounds of austere fiscal policies or allegedly pro-growth pressures in the North. We urge the Government of Brazil, the UNCSD Secretary General and all Member States to stop negotiating their short-term national agendas and to urgently agree now on transitional actions for global sustainable progress.

We want Governments to deliver the people's legitimate agenda and the realization of rights, democracy and sustainability, as well as respect for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the honoring of promises and accomplishments already. Sadly, time is running out. A rushed and weak agreement will be neither acceptable to us nor representative of the future we all want.

We urge our fellow 99% citizens of the world to stand up for the future we really want, and not this one, imposed by a few: the 1% negotiators and their elite constituencies.

For all, let their voices of the majority finally shape the future.

Initially signed by / Inicialmente assinado (firmado) por:

ANPED, The Northern Alliance for Sustainability

CIVICUS

Consumers International

IBON International

The World Future Council

IIDMA, Instituto Internacional de Derecho y Medio Ambiente  
Vitae Civilis  
IDEC, Instituto Brasileiro de Defesa do Consumidor  
SERI, Sustainable Europe Research Institute  
Asociacion Civil Red Ambiental  
Active R.E.M.E.D.Y  
Sociedade Sinha Laurinha  
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  
Citizen'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Eco-Horizon Instiute  
Forest for Life  
Green Asia Network  
Green Future  
Green Korea United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Green Foundation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YMCA of Korea  
People's Sustainabil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Neyo Reum  
ODA Watch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orea Zerowaste Movement Network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Korean Network from Green Transport  
Korean Network for My Body and Our Environment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 4. NGO 그룹 입장문 작성 워킹그룹 참여

- 한국 민간위는 NGO 그룹 전략 회의 참여를 통해 Climate Action Network - International (CAN-I)의 Director인 Wael Hmaidan이 NGO 그룹을 대표하여 본회의 개막식에서 대표로 연설한 2분의 NGO 그룹 입장문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특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에너지 구성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NGO 그룹의 명확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아래 입장문의 강조 처리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언급과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언급을 한국 민간위의 제안으로 추가하였음.

##### <본회의 개막식 NGO 그룹 입장문>

Thank you Vice-President

I am making this statement on behalf of the NGOs in Rio+20

It feels amazing to be in this room among all the world leaders, and feeling all this power around me that can shape the World. We all know the threat that is facing us, and I do not need to repeat the urgency. Science is very clear. If we do not change in the coming five to ten years the way our societies function, we will be threatening the survival of future generations and all other species on the planet. Nevertheless, you sitting here in this room have the power to reverse all of this. What you can do here is the ideal dream of each one of us: to have the opportunity to be the savors of the planet.

And yet we stand on the brink of Rio+20 being another failed attempt, with governments only trying to protect their narrow interests instead of inspiring the World and giving all of us back the faith in humanity that we need. If this happens, it would be a big waste of power, and a big waste of leadership opportunity.

You cannot have a document titled ‘the future we want’ without any

mention of planetary boundaries, tipping points, or the Earth's carrying capacity. The text as it stands is completely out of touch with reality. Just to be clear, NGOs here in Rio in no way endorse this document. Already more than 1,000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have signed in only one day a petition called "The Future We Don't Want" that completely refuses the current text. It does not in any way reflect our aspiration, and therefore we demand that the words "in full participation with civil society" are removed from the first paragraph.

If you adopt the text in its current form, you will fail to secure a future for the coming generations, including your own children.

To mention a few examples of failures in the document:

In the issue of finding resources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we see countries using the economic crisis as an excuse, while at the same time spending 100s of billions of dollars subsidizing the fossil fuel industry, the most profitable industry in the world. The first thing you can do is eliminating the existing harmful subsidies, especially fossil fuel subsidies, which was voted as the number one issue during the civil society dialogue.

Under the oceans section, you have failed to give a clear mandate to even start negotiating an implementing agreement to stop the Wild West abuse of the high seas.

There are many other failures in the document related to women's reproduction health, missed opportunities to start new global treaties on civil society participation and on sustainability reporting, the extraordinary lack of any reference to armed conflicts, **nuclear energy (especially in light of the Fukushima disaster)**, and many others.

But it is not too late. We do not believe that it is over. You are here

for three more days, and you can still inspire us and the world. It would be a shame and a waste for you to only come here and sign off a document. We urge you to create new political will that would make us stand and applaud you as our true leaders.  
Thank you

## 5. 옹저버로 본회의 모니터링

- 한국 민간위는 NGO 그룹내의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20~22일에 개최된 UNCSO 본회의에도 NGO 그룹을 대표하는 옹저버 성격으로 참여하였음. 전 세계 NGO를 대상으로 71개의 패스만이 발급되었고, 아태지역에 18개의 패스가 할당되었는데 한국 민간위에 4개의 패스가 배정되었음.
- 한국 민간위가 옹저버로 참여한 세션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본회의의 기조연설을 하는 세션도 포함되었음.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2백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아울러 강변을 따라 국토를 종주하는 1800km의 자전거길이 새로 열려 국민소통과 녹색생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음. 이는 22조원의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4대강 지류·지천과 해안·섬지역 농경지의 가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설 당시 104년만의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호도한 연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역시 그 실체가 불분명한 녹색 ODA를 2020년까지 50억불로 확대한다는 공약만 텅빈 공약만 남발하였음. 민간위는 이에 대해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한국의 녹색성장의 녹색 뒤에 감추어진 문제점들에 대하여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진정한 ‘녹색’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6. 공식 부대행사 개최

- 한국 민간위는 Rio+20의 공식 부대행사(Side Event)를 신청하여 ‘녹색 성장? 그들이 원하는 미래! -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라는 제목의 부대행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최하여 리우+20의 주제인 녹색경제에 대한 성공사례로 언급되는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였음.

##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Rio+20 공식 부대행사

### 녹색 성장? 그들이 원하는 미래!

-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T-10, RioCentro,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6월 18일 19:30-21:00

- 배경: ‘Rio+20 한국민간위원회’는 ‘녹색성장? 그들이 원하는 미래!’ 부대행사를 통해 ‘08년부터 진행되어 온 무늬만 녹색인 한국의 녹색성장의 실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비판적 시각과 경험을 세계시민사회 및 회원국들과 공유하였음.
- 지난 몇 년간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소수의 토건 재벌들과 투기꾼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준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이자 세금낭비사업인 4대강 사업과 비극적인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한 후에도 공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원전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온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은 Rio+20를 통해 전 세계가 추진하고자 하는 녹색경제의 바람직한 성격이 어떠해야 되는 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였음.
- 다시 말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보장하지 않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축인 사회적 발전을 담보하지 않는 성장 위주의 녹색경제는 전지구적인 환경위기를 초래한 현 경제 시스템에 녹색을 분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없을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민간위원회는 본 부대행사를 통하여 진정한 녹색경제의 모습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참여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서울시의 사례를 거울삼아 논의하였음.

○ 프로그램

19:30-19:35	<b><u>개회사</u></b> 남부원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19:35-19:40	<b><u>환영사</u></b> 박원순 서울시장
19:40-19:55	<b><u>발표 1</u></b> <b>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b> 박숙현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19:55-20:10	<b><u>발표 2</u></b> <b>녹색경제를 향한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에너지 계획: How Much에서 How To로</b> 김운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0-20:25	<b><u>발표 3</u></b> <b>생태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진정한 녹색경제를 위해서 어떻게해야 하는가?</b> 쿠미 나이두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20:25-20:45	<b><u>패널 토론</u></b> Facilitator: 이창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전문가 패널: - 이성훈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국제위원장 -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 헤만따 위다나지 지구의 벗 아태의장 - 양리 발룻 CIVICUS 대외협력국장
20:45-21:00	<b><u>전체토론</u></b>

- 개최결과: 민간위 공동대표이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인 남부원 공동대표가 행사의 기본내용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위를 소개하는 개회사로 행사는 시작되었음.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환영사로서 지난 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소비 감소 정책으로서 지역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서울시 원전 1기 줄이기 정책을 소개하면서 도시 차원에서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이어서 첫 번째 순서로 민간위를 대표해 시민환경연구소의 박숙현 연구위원이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에 대해 발표하였음. 박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과 원전 확대로 대표되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진정한 녹색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특히 한국정부가 대표 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실체에 대해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하였음. 두번째 발표는 지방정부를 대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김운수 선임연구위원이 '녹색경제를 향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을 주제로 서울시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1기 줄이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음.
- 세 번째 발표는 그린피스의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이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진정한 녹색경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였음.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서 비싸고, 안전하지 않고, 기후변화의 대책도 될 수 없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비해 너무나 적은 일자리만을 창출하는 원자력 발전은 진정한 녹색경제의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한국이 가진 훌륭한 기술력과 엄청난 신재생에너지 잠재성을 발굴하여 다른 선진국과 Green Race에서 경쟁할 것을 권고하였음.
- 이어서 이창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지정토론이 시작되었음. 첫 번째 토론은 100여개 국가의 45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 지구이자리우+20에 참여하고 있는 NGO 그룹을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CIVICUS의 앙리 발룻 대외협력국장이 발표하였음. 앙리 발룻 국장은 원전 1기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자연자원의 상품화로 인해 식료품 등의 버블과 물가인상이 발생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이를 지

양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음. 또한 이번 회의 주요 의제인 녹색경제에 대해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역할에 있어 국가중심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커뮤니티, 특히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음.

- 두 번째 토론자로는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NGO 피스보트의 가와사키 아키라 공동대표가 나섰음. 가와사키 아키라 공동대표는 지난 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일본의 상황을 공유하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음. 또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후쿠시마 사고의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이 일본과 함께 공동의 노력이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음.
-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성훈 국제위원장은 우리에게 Green Growth가 아닌 Green Peace가 필요하다는 토론으로 행사를 마무리지었음.

참고자료

## Rio+20한국민간단체준비위원회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 참여제안서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170개국의 정상과 민간 환경운동 대표 30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유엔 환경회의는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인류의 과제로 부여하였습니다. Rio 회의 이후 20년간 전 지구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나라도 Rio 회의 이후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Rio 회담 이후 20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해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수준은 심각하게 후퇴하였고, 녹색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우리의 4대강은 무참하게 파헤쳐졌습니다.

한국시민사회는 Rio 회의 이후 10년을 맞이했던 지난 2002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Rio+10 회의에도 한국민간단체 대표단을 구성하여 300여분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Rio+20 회의에는 최초의 지구정상회의가 열렸던 곳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는 Rio+20한국민간단체준비위원회에 우리 사회 제반 영역이 참여하여 지구사회의 일원인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 정착을 도모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Rio+20한국민간단체준비위원회는 결코 환경단체만의 위원회가 아니라 국내의 모든 민간단체들과 주요 그룹들의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단체의 참여를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 대한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 <입장 요약>

- 1) Rio+20는 지난 20년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지구 생태계의 수용능력 하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야 한다.
- 2) '92년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사전 예방의 원칙'과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은 Rio+20에서도 핵심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3) 녹색경제의 도입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대체하거나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녹색경제하에서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4) 한국 정부가 Rio+20를 통해 녹색성장의 실례로 홍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녹색분칠에 불과하며 원자력 발전의 확대 역시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에너지정책이라 할 수 없다.
- 5) 지속가능발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인권분야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도를 벤치마킹한 동료검토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 6) 미래세대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대표할 UN Ombudsperson / High Commissioner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 7) 혁신적인 재원의 하나로 금융거래세(FTT)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 8) ODA는 선진국들의 생태부채를 변제하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선진국들은 GNP대비 0.7%를 ODA로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 9) 원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각국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10) Rio+20를 통해 UNFCCC 당사국 총회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선진국 주도의 강력한 감축량 합의를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 [서문]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전 인류 차원에서 다급한 인류 생존의 문제와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했던 기념비적인 지구정상회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정상들은 환경, 경제, 사회의 세 축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인류 공통의 과제로 제시한 리우 선언과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 협약 등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우 회의 이후 지난 20년간 지구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국가 간의 빈부격차와 개별국가 내에서의 사회적 불평등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합의는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생물종 다양성은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사막화 현상 또한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리우+20회의는 지난 20년간의 리우 선언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더욱 심화된 위기에 직면한 지구사회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리우+20회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기에 처한 지구 공동체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며, 심지어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감조차도 느낄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엔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정상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이 인류 생존에 얼마나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빈부격차가 왜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형국에 빠져 있습니다.

금번 리우+20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와 빈곤퇴치를 위해서 '사전 예방의 원칙' 및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입각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한국의 민간단체는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지구사회가 당면한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녹색경제는 지난 1992년 리우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보다 후퇴한 개념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의 세 개 분야를 통합하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개념이나, 녹색경제는 이중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간과한 개념이며, 경제와 환경의 두 가지 분야 중에서도 환경보호보다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방점이 찍혀있어 현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위기에 대해 과거보다 역행하는 흐름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경제라는 개념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전 지구적으로 처한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간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빈곤퇴치에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Rio+20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경제의 실례로 들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녹색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콘크리트를 중심으로 한 회색경제에 어울리는 정책입니다. 또한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홍보되는 원자력 발전의 공격적 확대 정책 역시 전혀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에너지정책이 아닙니다. 지난해 발생한 비극적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에너지가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이었던 일본은 지난 5월 5일을 계기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54개의 원전을 전면 가동 중단했으

며, 독일과 스웨덴도 각각 2022년, 2034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단계적 탈핵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에 공격적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한국 등 몇몇 소수 국가에 불과할 정도로 원전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이며, 녹색경제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의 조화로운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환경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92년 리우회의 이후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많은 협약과 선언들이 있어왔지만, 실제적인 성과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서 지속가능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이행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만큼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를 강화하는 의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 UNEP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그 실천력을 담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므로 그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는 체제의 수립과 발맞춰 개별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92년 리우 선언 이후로 설립한 지방의제 21은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두 개의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던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현 정부에서 해체한 것은 한국정부의 명백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21세기 환경선진국을 희망하는 한국에서는 차기정부에서라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기구들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후속조치와 행동을 위한 체제]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및 행동을 위한 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Rio+20의 결과 문서 협상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료검토(peer review)의 도입을 한국의 민간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인권분야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도 도입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동료검토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2015년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보완할 새로운 국제개발협력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도입을 한국 민간단체는 지지합니다. SDGs는 개도국만이 아닌 Rio+20의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하며, MDGs에서 다루지 못한 분야들을 포함하여, 경제, 사회, 환경의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표가 되어야 하며, 각 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Rio+20를 통해 SDGs를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원칙과 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Rio+20이후 이를 위한 프로세스가 출범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단기적 임기에 영향을 받는 국가 지도자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대표할 UN Ombudsperson 혹은 High Commissioner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한국의 민간단체는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 GNP 대비 0.7%를 ODA로 제공하고 GNP대비 0.15~0.20%를 최빈국에 지원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약속을 선진공여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ODA는 회복 불가능한 한계 시점에 다다르며 파괴되어 가는 유한한 지구생태계와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개도국과 입게 될 미래세대에 선진국이 지고 있는 역사적, 현재적 생태부채를 변제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공여국들은 ODA를 시혜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거나 자국의 국익 추구 및 기업 진출의 수단으로 이용

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형평성을 담보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적인 재원의 하나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이번 Rio+20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원조가 기업의 사적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지 않도록 민간 기업이 준수해야 할 국제적 원칙과 기준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 [주요 분야별 이슈에 대한 입장]

##### <식량주권>

식량주권에 관한 논의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Rio+20의 논의 내용은 지금까지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및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농업, 농민, 먹거리 분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논의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의 농민단체는 근본적으로 농산물에 대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전면적 자유무역을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보조금, 농민 직거래, 가격지지, 생산기반 및 환경보존 등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결정되고 자국의 농민과 생산기반에 의한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전세계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던 2008년 국제식량위기를 돌아볼 때 WTO 주도로 추진되는 자유무역은 전세계 국가들의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 자급 능력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혁명이 아닌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파괴하는 품종개량, 화학비료 및 농약의 과용으로 이룩된 녹색혁명은 더 이상 식량부족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농업을 초국적 농기업들이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식량주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농업이 아닌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이 되어야 하며, 농민과 원주민에 의한 자원의 관리가 보장된 생태농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물>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다. 새천년개발 목표에서 제시된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이나 위생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현재의 추세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물과 위생서비스의 국가 간 격차, 국가 내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또한 물과 위생에 대한 투자가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농어촌 등의 소외지역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시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도농 간의 격차를 더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민영화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써의 물과 위생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가 Rio+20의 결과문서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폐수관리의 목표가 오염 배출을 줄이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환경의 보존과 복원까지 나아가야 한다. 물의 효율적 이용보다는 물의 보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수자원의 개발은 수환경의 지속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폐수의 재이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개도국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요하고 빗물이용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적 지원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가 커지는 방향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자립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해당 사회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기술이전이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에너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국가, 계층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유엔 사무총

장이 제안한 '만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조속히 출범할 것을 제안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두 배 이상 개선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조치가 필요하며, 단순한 효율 개선보다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화석 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축소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산업, 고용, 연구개발, 및 사회적 인프라수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될 수 없으며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스리마일과 체르노빌에 이어 2011년 발생한 비극적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저렴한 에너지도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으므로 전 세계가 나서서 전 지구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 <도시>

도시 정부는 토건 위주의 개발 정책을 지양하고, 현재 도시재정의 위기에서 벗어나 저비용 저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의 통합성을 기하고, 칸막이 행정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하고, 도시계획과 제반 정책결정 과정에 광범위한 시민참여와 정보 접근권을 제도화해야 한다. 의제 21이 규정하고 있는 9개 주요 그룹(여성, 청소년, 농민, NGO, 지방정부, 노동자와 노동조합, 기업 및 산업계, 과학기술계, 원주민)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의사결정과 실천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시의 지속가능발전계획과 실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제 21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계획과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ICLEI를 매개로 지방의제 21이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계획과 실천에 연계될 수 있게 하고, 중앙정부는 정책분야별 총괄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2012년 2월 13일 4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환경수도', '자전거도시', '슬로시티' 등을 표방하는가 하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도시농업, 로컬푸드, 마을 공동체 복원, 마을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외부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기업의 지방화를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생태적 시민권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지방자치와 도시의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 <녹색일자리>

Rio+20 준비위원회가 공개한 Rio+20 결과문서 초안(Zero Draft)에 대하여 국제노총(ITUC)은 2012년 2월 아래와 같은 '3대 최우선 요구 및 20개 수정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의 노동계는 이를 지지한다. 3대 최우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사회적 발전을 보장하는 녹색경제의 원칙을 수립하고, 둘째, 녹색일자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회의 초반부터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제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20개 수정 요구사항은 1) 서문에 지속불가능한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 언급, 2) 금융거래세와 같은 새로운 재원의 시행, 3)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여 인정, 4) 일관된 의사결정 지도원칙, 5) 녹색경제는 단순 고용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 6) 노동조합의 녹색경제 10대 원칙 포함, 7) 사회진보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세제 개혁과 같은 녹색경제도구의 우선화 기준 마련, 8) 녹색투자를 통한 일자리, 9) 사회 진보와 환경보호를 이익보다 의제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정치 우선화, 10)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맨 설치, 11) 정보접근, 시민참여와 환경정의를 다루고 있는 리우선언 10대 원칙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회의 창립, 12) 물과 위생서비스의 공공성, 13) 에너지 접근의 공공성, 14) 산업안전보건, 15)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16) 일자리 창출 지도기준으로써

의 양질의 일자리, 17) 녹색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계획, 18) 노동조합과 녹색일자리 협의, 19) 정의로운 전환 전략 수립, 20) 사회보장촉진 목표 등이다.

#### <해양과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Aichi Target)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별 국가, 지역,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해양자원 및 해양생태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양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단, 예를 들어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종보호협약(CITES, IUCN)의 보전정책 등이 각 수준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정의도 국제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산호초, 망그로브숲 등과 같이 해양의 산성화, 기후변화, 남획, 연안개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위기에 몰린 해양생태계는 선언적 의미 이상의 구체적인 보호프로그램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촉구해야 한다.

세계식량기구(FAO)가 상업적 어업의 붕괴를 예견할 정도로 어족자원은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SIDS) 및 공해상의 자원남획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장과 도서연안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해양자원관리와 보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수산위원회(RFMOs)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국제적, 지역적 수준의 의사결정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불법어획(IUU)을 근절하기 위한 도서연안국의 관리권이 공해까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자원의 평가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생태계적 접근법(Ecosystem Approach)에 따라 생태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양자원회복을 위한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해양투기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리우+20이 제안하는 전 지구적 프로그램의 도입이 국제협약(예. 런던협약)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제안되어야 하며, 개별 국가의 과거 및 현재의 경제적 규모에 맞게끔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의 비용이 저개발국가의 환경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구체적 형태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리우+20의 초안에 명시된 해양의 산성화를 감시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은 보다 구체화되어 국제협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태평양을 비롯한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SIDS)의 빈곤과 기후변화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산업화, 자원남획, 개발원조 등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로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에 대한 부적절한 경제적 지원은 섬 생태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섬 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도서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를 위해서는 UN차원에서의 별도 논의가 있어야 하며,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의 지속가능성을 선진국, 특히 원조지원국의 입장이 아니라 도서국가의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되어야 한다.

#### <자연재해>

Rio+20 결과문서 초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효고프레임워크 등에 기초한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실정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대응해야 한다. 재난업무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재난발생 후 복구계획보다는 발생 전 예방 및 안전대책에 치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효고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이행이 촉구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돕는 캠페인 및 교육, SNS활동 및 예방홍보, 지역별 재해대책위원회 조직 및 재해교육, 재해 시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재해체험, 노인들에 대한 정기적 보호 확인 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국가, 지역 내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중요한 과제이며, Rio+20을 통하여 더욱 개선된 재해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빈곤·여성·환경·불평등·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io+20에서도 이점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더반회의(COP17) 결과는 선진국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조성되어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으며 선진국 그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안을 Rio+20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Our Common Future)'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이다. 이는 비록 다자간 협상 틀이 깨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현재 표류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상의 실정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적절치 못하다. Rio+20를 통해 UNFCCC 당사국 총회가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선진국 주도의 강력한 감축량 합의를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Rio+20 결과문서 초안의 기후변화 취약성 부분은 상징적 언급에 그치고 있어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게다가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조한 부분은 UNFCCC 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 및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Rio+20는 그 위상에 걸맞은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번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를 국제 협력 과정의 범분야 이슈로 명문화하고 전략환경평가(SEA)의 의무 도입을 선언해야 한다. 전략환경평가는 개별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의 정책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 평가과정이므로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불안요인들에 통합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본 프로세스 이외에도 개도국은 사회적 취약성이 높아 기후변화대응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국제협력재원 외에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에 대한 약속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토지퇴화와 사막화>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의 추진은, 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탄생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반을 토대로 진행될 수 있다. UNCCD는 현재 건조지에서의 토지퇴화인 사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건조지만을 대상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대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토지퇴화 현상을 포괄하지 못했다. 따라서 UNCCD를 사막화를 넘어 토지 퇴화 전반을 포괄하는 협약으로, 아프리카를 넘어 유라시아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한 추진체로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을 이번 리우+20에서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한 UNCCD의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30년까지 토지 황폐화를 0%로 만들자는 UNCCD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주류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세 개의 리우 협약 -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생물다양성협약 -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번 리우+20이 세 가지 리우협약 간 기존의 연계 노력을 강화하고, 이에 더해 세 협약에 관계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각 협약의 과학자문기구 간의 연구 협력 등 새로운 과제를 결정하고 실행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산>

산은 지구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고 중 하나로 가치가 매우 높으나, 초안에도 나와 있듯 기후변화에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 많은 탐방객이 산지를 찾음에 따라 답압이나 개발 압력에 따른 훼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 지구적 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적응 계획 수립, 제도 보완, 자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탐방객의 증가와 개발압력으로부터 산림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국제적 기준 설정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산림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지의 보전에 있어서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생물다양성 관리의 핵심으로 꼽히며, 서식지보전과 공간 관리의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해서 Red List를 두어 관리하고, 습지보호를 위해 람사르 지정 습지가 있듯,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에 대해서 전 세계차원의 기준을 두어 지정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지의 이용에 있어서 목재로 필요한 수목은 조림지를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숲 치유와 트레킹 등 산림을 이용한 여가 활용의 경우, 생태관광, 공정여행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윤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가 확산되도록, 국제적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화학물질과 폐기물>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SAICM)을 강화하는 것은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전 세계적으로 최소화하는 길이 분명하다. 이러한 Rio+20 결과문서 초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출한다.

첫째, SAICM이 목표하는 2020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SAICM을 선언적으로 강화하라고 하기 보다는 책임 있는 국제기구를 지정하고, 국가별 이행정도를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성을 언급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경제적 발전수준에 비해 SAICM 이행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이 부끄러워 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의 능력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보다 안전한 물질로의 대체(substitution)'를 장려하기 위하여 대체물질 정보 구축 및 공유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따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용가능한 대체물질의 존재 여부는 독성에 기반한(hazard-based) 고독성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및 금지에 있어 결정적 근거가 된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대체물질 연구가 선진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대체물질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고독성 화학물질을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녹색산업이 화학물질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언급이 필요하다.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선언적 국제협약에서 규제적 국제협약으로의 강화가 필요하다. 바젤협약에서 국가 간 유해폐기물 이동금지가 있으나 선진국 유해폐기물이 재활용이라는 바코드로 바꿔 개도국이나 최빈국으로 수출, 처리 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이 최빈국에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유해폐기물을 수출해도 국제협약에서는 아무런 재제수단이 없다. 최빈국은 처리기술과 예산이 부족하여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젤협약의 강화를 제안한다.

1. 바젤협약에 따른 국가 간 유해폐기물 이동 적발 시 패널티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2. 바젤협약 상 전자폐기물이 재활용 바코드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3. 선진국들은 최빈국에 유해폐기물 처리 신기술을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

### <교육>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이 되는 해인 2014년까지 2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환경교육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환경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교육이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보존과 보호에 중심을 둔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정의, 빈곤, 민주주의, 삶의 질과 같은 사회문화적 쟁점과 사회정치적 쟁점은 물론 사회적 변화와 진화하는 환경 등 발전과 관련된 개념들을 포괄한다. 때문에 교육주체들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다. 명확한 개념 정의와 함께 교육 모듈 개발과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구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한 핵심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3가지 축(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기반이 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역과 연계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체계를 국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 <성 평등>

리우 선언 원칙 20에서는, 여성이 환경관리 및 개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여성들의 완전한 참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근본적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리우+20의 결과문서 초안에서는 이런 관점이 매우 부족하며 협소하게 다루어졌다. '성 평등' 부분뿐만 아니라 리우+20 결과문서의 모든 장과 이슈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의 관점 통합과 여성의 완전한 참여 및 역량강화가 사회, 경제, 환경의 세 토대 모두를 성취하는 데 본질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초안의 102-104장을 차지하는 '성 평등' 파트는 재작성 되어야 한다. 특히 102장은 성 평등 부분의 첫 장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성 평등과 여성의 역할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언급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103장에서는 '여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경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여성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 대신 '여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으로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104장에서는 UN Women의 활동뿐 아니라 그 활동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집행의지를 추가하기를 바란다. 또한 '삶의 모든 역량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대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수정하기를 요구한다.

한국의 경우 리우+10 이후 성평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부문에서 성과가 있었다. 특히 지방의제21에서 성 평등 의제와 관련된 활동이 의미 있게 확산되었다. FTA 체결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촌현실 속에서 여성농민들의 토종종자운동과 토종텃밭사업이 꾸준하게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지역의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녹색소비운동 및 대안경제 활동도 활발하다. 반면 경제 및 의사결정 부문의 성불평등과 부의 편중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지속가능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정기구와 거버넌스에 여성참여 비율이 여전히 낮고, 2008년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예산 또한 고급에너지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주도의 녹색성장 정책은 '의제21'이나 '북경행동강령'에서 강조한 생산자, 교육자, 기업인 등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간과하고 소비자로서만 규정하고 있어 젠더관점의 통합이 필요하다. 모성보호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통합형 여성건강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더욱 심각해진 핵에너지 폐기와 대안에너지 정책 추진 및 평화정착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한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와 평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와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Rio+20 결과문서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녹색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이행 수단의 핵심으로써 다루어져야 한다. 92년 리우회의와 2002년 WSSD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으로의 변화에 포함된 환경행동강령으로 '지속가능한 소비'가 정의되고, 마라케쉬 프로세스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 10개년 계획이 제19차 지속가능개발위원회(CSD/2011.5)에서 검토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검토만 되고 리우+20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 녹색경제 이행 수단으로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이번 리우+20은 선언만 있고, 실전은 담보하지 못한 회의로 한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결과문서의 주요 의제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마라케쉬 프로세스에 의해 계획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실천 과제가 채택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리우+20에서 강한 결의를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세계의 기본토대가 세계시

민 개개인의 저탄소 생활양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안된 세계시민사회와의 협력 안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수립 동향과 세부 내용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KCOC 정책센터장

[alee7080@gmail.com](mailto:alee7080@gmail.com)

1. 들어가면서
2. SDGs 수립 과정 개관 (이슈 브리프 12쪽 참조)
3. SDGs 주요 쟁점 – 국제시민사회의 관점에서
4.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제언

\*표: SDG의 구조

## 1. 들어가면서

- 2014년 11월 현재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는 OWG-SDG가 지난 7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수립을 계기로 왜 (비전)와 무엇 (목표) 대한 논의는 일단락 되고 구체적인 목표 (세부 목표 target)과 어떻게 (책무성 메커니즘, 이행수단과 파트너십)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로 전환.
- 지금까지는 SDG-OWG에서의 협의 (consultation) 중심에서 2014년 11월 말 유엔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정부간 협상 (negotiation) 모드로 전환
- 시민사회는 자체 교육과 홍보 및 의견 수렴과 제출에서 구체적인 캠페인과 로비로 전환
- Post-2015 특히 2015년은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도전.
- 국내적으로 2015년은 제1차 ODA 선진화방안(2011-2015)이 종료되어 제2차 계획을 준비하는 시기.
- SDGs가 수립되면 이는 2016년부터 국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프레임으로 국내의 정책 프레임워크 또한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SDG 배경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SDGs 체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2. SDGs 수립 과정 개관 (이슈 브리프 12쪽 참조)

### 2000-2009년

-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선언
- 2002년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MDGs) 채택
- 2008년 유엔 개발협력포럼(DCF)

## 2010년 2014년

- 2010년 유엔 MDG+10 특별세션 및 결의안 채택
- 2012-2013년 주제별 (11개) 및 국가별 (50개 이상) 다자간 협의
- 2012년 6월 유엔 작업반 (TT) 보고서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 2012년 6월 리우+20 결과문서 "The Future We Want"
- 2013년 5월 유엔 고위급패널(HLP) 보고서와 12개 목표와 세부목표 제시 "A New Global Partnership"
- 2013년 7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발표 (14개 목표) "A Life of Dignity for All"
- 2013년 9월 제1차 고위급정치포럼(HLPF) 개최
- 2014년 7월 SDG 공개실무분과 (OWG) 17개 SDGs 제안
- 2014년 8월 유엔 지속가능발전재원 (SDF) 정부간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 2014년 9월 제2차 고위급정치포럼(HLPF) 개최
- 2014년 10월 유엔 사무총장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에 대한 독립 전문가 자문그룹 보고서 초안 발표 "A World That Counts"

## 2014년 11월 - 2015년 9월

- 2014년 11월 말 유엔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synthesis report) 발간
- 2014년 2월 - 7월 SDG 정부간 협상
- 2014년 7월 개발재원 고위급 회의 (아디스 아바바)
- 2014년 9월 유엔 정상회의 / 총회 - SDGs 채택

### **3. SDGs 주요 쟁점 - 국제시민사회의 관점에서**

#### 1) 보편성 (universality)의 의미와 국내적 적용

SDGs는 모든 나라에 적용한다는 보편성의 토대에서 구축, 즉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모든 SDG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여기서 정책일관성이 강조됨. 따라서 각 각 목표와 세부목표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 적절한 목표의 수

현재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이를 소통하기 쉬운 10개 내외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소수에 머물고 있음 (한국, 영국 등) 기존 목표의 내용을 축소 누락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재구성해서 이해 및 소통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음. (예,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목표 통합)

### 3) 지속가능개발 자원 마련

빈곤퇴치에서 ODA의 역할과 비중 감소에 따른 새로운 혁신 자원의 중요성 대두. 국제적 차원의 공공자원 마련이 중요함. 한편 국내개발자원으로서의 세금의 중요성 증대되면서 조세회피가 중요한 과제. 이는 세무분야의 거버넌스로 투명한 거버넌스 제도의 중요한 요소임. 자원 구축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는 것도 중요.

### 4) 글로벌 파트너십

빈곤퇴치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시행되고 있음. 특히 SDG 이행 관련 부산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대두.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BRICS 국가는 소극적 태도 견지하고 있음. 국가간 정치적 이해관계와 헤게모니가 아닌 지구적 빈곤퇴치를 위한 책무성과 효과성 증진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치적 환경 조성이 중요함.

### 5) 책무성 메커니즘

현재 16번과 17번에 담긴 책무성 메커니즘은 매우 취약함. MDGs 보고서 처럼 자발적 보고서 발간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음. 인권분야의 보편적정례검토 (UPR) 처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정기적으로 공개적으로 심사를 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국내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다층적 메커니즘 수립이 매우 중요함. 책무성 거버넌스 관련 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의 전략적 활용도 중요하게 대두.

### 6) 모니터링 - Data Revolution

정부의 통계 작성 역량 강화와 더불어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는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정당성 증대와 개발정책의 효과성 보장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 통계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

### 7)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

실제 정부간 협상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메커니즘 구축이 중요. 이는 이후 SDG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주인의식에 기반한 참여를 구축하는데 필수적. 다양한 형태로 협상 과정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함.

#### 4. 한국시민사회의 역할과 제언

##### 1) 국내 이슈와의 연계 강화 및 의제 일치

원조 중심이었던 MDG와 달리 SDG는 정책 중심의 목표로 구성, 이는 향후 한국정부가 국제 개발의제와 규범에 부합되도록 국내의 정책을 검토 개정해야 함을 의미 (정책일관성), 따라서 국내 시민사회의 정책 애드보커시에서도 국제 규범 및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개혁 압력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 애드보커시 역량 강화가 요구됨.

##### 2) 국제개발협력의 주류화를 통한 국제연대 활성화

국제개발협력(ODA)은 국내 시민사회운동에서 부문으로 머물지 말고 전체로 확산, 주류화되어야 함. 역으로 국내의 시민사회단체 또한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하여 기존의 국제연대 운동을 한단계 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전통적인 자선위주의 국제개발협력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만들기 등)은 국제개발협력 틀을 활용하여 국제화할 필요가 있음. 전통적인 새마을 운동 또한 '정치적, 이념적 잣대'를 넘어서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개도국 농촌 빈곤퇴치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3) 한국정부의 대외정책 감시 및 견인

국제개발의 주요 이슈에 관해 한국정부의 입장과 활동을 비판적으로 모니터하고 견인하는 캠페인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정부가 좁은 의미의 '국익' 관점을 넘어서 국가 내 및 국가간 불평등 목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SCP), 투기자본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유세, 조세회피 등 한국사회에도 중요한 의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 입장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함.

##### 4) 한국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한국정부는 Post-2015 의제논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국제 시민사회 입장 - 참여 및 책무성 강화 등 - 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산 총회 유치, GCF 유치 등 국제개발에서 리더십 위치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노력에 한국정부가 우호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 SDGs의 구조

목표 (비전)	빈곤 퇴치 (1)		불평등 감소 (10)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요 영역별 내용	사회발전 (2, 3, 4, 5, 11)	경제개발 (7, 8, 9, 15)	환경 (6, 13, 14, 15)
이행 전략	거버넌스와 책무성 (16)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7)

✓ 대부분의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에 중첩적인 성격을 지님 특히 에너지(7), 물과 위생(6), 도시(11).

세부 구조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 (1) 국가 내·국가간 불평등을 완화 (10)		
<p style="text-align: center;"><b>사회발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아 해소,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한다. (2)</li> <li>➢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인구의 복지를 증진(3)</li> <li>➢ 양질의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 (4)</li> <li>➢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여아의역량을 강화 (5)</li> <li>➢ 포괄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지를 조성 (11)</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경제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신식(modern)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 (7)</li> <li>➢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 (8)</li> <li>➢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시키며, 혁신을 장려 (9)</li> <li>➢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패턴을 보장 (15)</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 (6)</li> <li>➢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 (13)</li> <li>➢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바다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 (14)</li> <li>➢ 육지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을 증진시키며, 지속 가능한 삼림을 위해 관리하고, 사막화를 중지 및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 (15)</li> </ul>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증진시키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제공하고,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괄적인 제도를 확립 (16)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재활성화 (17)		

## Propos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July 2014

- 1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 6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 7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 9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 10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 13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15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 17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2030년을 달성기한으로 하는 SDG (안)

1. 모든 국가에서 빈곤을 근절한다.
2. 기아를 근절하고, 영양상태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3.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린다.
4. 모든 사람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5. 모든 지역에서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6.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사용량의 식수와 위생을 보장한다.
7.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보장한다.
8. 지속적·포괄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시킨다.
9.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화를 증진시키고 혁신을 장려한다.
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을 완화(Reduce)한다.
11. 포괄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지를 조성한다.
12.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패턴을 증진시킨다.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을 제거(Tackle)한다.
14. 해양·바다·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을 독려한다.
15. 육지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을 증진시키며 사막화, 토지황폐화,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시킨다.
16.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효과적이고 역량을 갖춘 정부를 확립한다.
17. 이행수단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참고자료

---



★ 이 문서는 SDG OWG 17차 회의 결과문서(2014년 7월 19일자)의 비공식번역본(초안)으로 번역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위한 공개작업반 제안서 서문**

1. 리우+20 회의의 결과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서는 제 68차 유엔 총회에서 검토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개작업반을 설립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설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SDGs 구성을 위한 개념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리우+20 결과문서는 SDGs가 2015년 이후의 유엔 개발의제와 일선상에 위치하고 통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 빈곤퇴치는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리우+20 회의 결과는 인류가 빈곤과 기아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3. 빈곤퇴치,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으로의 전환 및 증진, 경제·사회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천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목표이자 필수요건이다.
4. 사람은 지속가능발전의 중심이며 이와 관련하여 리우+20 회의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를 증진시켜 모든 사람, 즉 연령, 성별, 장애, 문화, 인종, 민족, 출신, 신분, 종교, 경제능력 및 기타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아동, 청소년, 미래 세대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5. 공개작업반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제 7 원칙에 해당하는 공통의, 그러나 동시에 차별화된 책임을 포함한 모든 원칙에 동의함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6. 공개작업반은 리우 선언, 아젠다 21, 아젠다 21 이행 진전을 위한 계획,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의 (WSSD) 이행계획(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지속 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계획(바베이도스 행동계획),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진전을 위한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모리셔스 전략 등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2011년-2020년 최빈국을 위한 행동계획 (이스탄불 행동계획), 내륙국 및 수송개발이 필요한 국가를 위한 수송교통협력의 새로운 글로벌 프레임워크 내에서 내륙중계개발도상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알마티 행동계획, 아프리카 개발 필요에 대한 정치적 선언,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등의 완전한 이행을 확인했다.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모든 주요 유엔 회의와 정상회의, 새천년선언,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의 결과, 개발재원국제회의에서 도출된 몬트레이 합의문, 개발재원 마련에 대한 도하선언,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고위급회의의 결과문서, 세계인구개발회의(ICPD) 실천계획, 베이징 행동강령 및 재검토 회의에서의 결과문서 등의 이행을 재차 확인했다. MDGs 달성노력에 대한 2013년 9월 Special Event 결과문서의 내용, 특히

강력한 Post-2015 개발목표를 구성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 이주와 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회담 선언에서의 이주와 개발에 대해 약정한 바를 모두 이행하겠다는 것을 확인했다.

7. 리우+20 회의 결과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과 국제법 및 원칙을 존중하며 관련 지침을 준수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자유, 평화, 안보, 모든 사람의 인권존중, 즉 발전권, 식량권, 식수권 등 적절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법의 지배, 굿 거버넌스, 양성평등, 여성의 권리증진, 발전을 위한 정의와 민주적 사회 등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과 인권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제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8. 공개작업반은 기후변화 현상의 속성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폭넓은 의미의 협력을 촉구하며, 전 세계적 온실가스배출의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이들의 참여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국제적 대응으로 이어지기를 강조했다. 또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의 당사국은 형평성 원칙에 따라,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국가별 역량에 따라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기후 시스템을 보호해야 함을 재강조하고자 한다. 모든 당사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연 배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지구의 연평균 기온 상승을 2° C 미만 혹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C가 더해진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는 약속과 현재 상황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표는 대기층의 온실가스 누적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한 인류에의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화하겠다는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9. 지구와 생태계는 모든 인류의 집이며 “대지(大地: Mother Earth)”는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공개작업반은 일부 국가에서는 자연의 권리를 지속 가능발전 증진의 개념 안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리우+20 회의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경제, 사회, 환경적 수요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과의 조화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세계의 자연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였으며 모든 문화와 문명은 지속 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10.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데 특수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특별히 취약국가, 즉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중계개발도상국가, 군소도서개발도상국가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분쟁상황에 놓여있는 국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1. 리우+20 회의는 국제협력의 강화를 통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특히 개도국과 관련한 지속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경제의 안정성, 지속적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성 증진, 환경 보호, 양성평등, 여성 권리증진, 모두를 위한 공정한 고용,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아동의 보호, 생존, 발달 등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12. 각 국가는 당사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국가 정책, 국내 자원, 국내개발 전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출자로 결집된 자원과 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다. 리우+20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와 이행을 위한 필요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확언한 바 있다. "지속 가능발전 자원 마련을 위한 정부간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는 자원 마련 전략의 여러 옵션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에 개최되는 제 3차 개발재원국제회의의 실질적 결과를 통해 몬트레이 합의와 도하 선언의 이행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굿 거버넌스와 국내·국제적 수준에서의 법의 지배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이고 공정한 경제발전과 지속 가능발전, 빈곤과 기아 퇴치에 필수적이다.

13. 리우+20 회의에서 우선순위 목표인 3가지 차원에서 각 국가가 지속 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 비전, 모델, 도구가 존재함을 재차 확언한 바 있다.

14. SDGs의 이행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정부 및 시민사회, 민간부문, UN 기구 등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견고한 이행 검토 메커니즘은 SDGs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유엔 총회, 경제사회위원회, 고위급 정치 포럼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15. 리우+20 회의는 식민통치나 외세의 점령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 및 환경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보호되지 못해 자결권의 완전한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므로 이를 국제법에 따라 제거하고 대항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와 행동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16. 리우+20 회의는 유엔 헌장에 의거, 목표는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에 대항하는 행동을 승인하거나 권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복합적인 인도주의적 긴급상황과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장애물과 장벽을 제거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특별한 필요를 충족하고 할 수 있도록 국제법에 따라서 효과적인 조치와 행동을 취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17. SDGs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및 국가상황과 관련된 속성 등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 및 통계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분화 된 데이터의 질, 범위, 이용가능성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18. SDGs는 세부목표가 수반되며 향후 지표를 통해 측정이 가능한 성과에 중점을 두어 정교하게 설정될 것이다. SDGs는 행동중심적이며 전 세계적인 속성을 담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가별로 다양한 실상, 역량, 발전 수준을 고려하며 국가정책과 우선순위를 존중한다. 새로운 목표는 MDGs의 기반을 토대로 달성하지 못한 임무를 완수하며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세부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지향하는 세부목표이며 더불어 각국 정부가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목표를 이에 일치시켜 설정할 수 있다. 목표와 세부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측면을 통합하며 모든 측면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각 3가지 측면의 상호연계성을 반영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목표(안)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한다.

-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 1.2 2030년까지 국가가 정의하는 모든 측면에서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아동 인구를 최소 절반까지 줄인다.
- 1.3 사회적 안전망을 포함하여 국가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실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보장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자원, 기본 공공서비스, 소유권,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관리, 천연 자원, 최신 기술, 미소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극심한 기후관련 현상 및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재난 및 충격으로부터 복원력을 배양하고 취약성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에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개발협력의 강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모든 차원에서의 빈곤 근절을 위한 계획과 정책이 이행되도록 한다.
- 1.b 빈곤계층을 우선시하고 성인지적인 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빈곤퇴치를 위한 행동에 투자증대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지역(대륙)·국제사회 수준에서의 견고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 목표(안) 2. 기아 해소,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한다.

- 2.1 2030년까지 기아를 근절하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일년 내내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 2.2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근절, 특히 2025년 까지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5세 미만 영유아의 발육부진 및 체력저하 감소에 대한 세부목표를 달성하며 청소년기의 여아,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여성, 노인의 영양필요를 채운다.
- 2.3 2030년까지 토지, 생산적 자원 및 기술,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가치부가 및 비농업 부문 고용의 기회 등에 대한 접근을 안정적이고 동등하게 보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과 소작농, 특히 여성과 소수민족, 가족농, 축산농가, 어부 등의 소득을 2배로 늘린다.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성과 생산을 향상시키며,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이변, 가뭄, 홍수 및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며, 토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복원력 중심의 농경법을 실행한다.

2.5 2020년까지 국가·지역(대륙)·국제사회 수준에서 관리되고 다변화되는 종묘/식물 은행을 통해 종묘, 재배 식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자 자원이나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2.a 국제협력의 강화를 통해 농어촌 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가축과 식물 유전자 은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분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한다.

2.b 도하개발의제의 지시사항에 따른 모든 유형의 수출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지닌 수출지원제도를 동등하게 제거하는 등 세계 농업시장의 무역제한과 왜곡현상을 정정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품가격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에 대한 적시적 접근을 촉진한다.

### **목표(안)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인구의 복지를 증진한다.**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률을 100,000명 당 70명 수준으로 낮춘다.

3.2 2030년까지 예방가능한 신생아, 영유아, 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을 종식시킨다.

3.3 2030년까지 HIV/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NTD)과 같은 전염병을 종식시키며 간염, 수인성 질환, 기타 감염성 질환 퇴치를 위해 노력한다.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1/3 수준으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3.5 마약성 물질 남용과 알코올 남용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3.6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를 절반으로 줄인다.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와 교육, 생식보건을 국가 전략 및 사업에의 통합 등을 포함하여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3.8 재정적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함으로써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한다.

3.9 2030년까지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공기, 식수, 토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대폭 줄인다.

3.a 모든 국가에서 적절하게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강화한다.

3.b 특히 개도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도하 선언에서 공공보건의 보호, 특히 약품에 대한 접근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개도국에 탄력적 적용을 허용하는 TRIPS(지적재산권협정) 조항이 개도국의 권리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3.c 개도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보건 예산과 인력의 채용, 개발, 훈련, 확보를 대폭 확대한다.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조기경보, 재난위험경감, 국내/국제적 보건 위험을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안) 4. 양질의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시킨다.**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무료로 동등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유아발달과 보호, 유아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양질의 지불 가능한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직무능력 및 기술을 보유한 청년과 성인의 비율을 x% 수준으로 확대한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 소수민족,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인구에게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성인의 최소 x%가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적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인식, 문화의 지속 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해 모든 학습자들이 배움으로써 모두가 지속 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4.a 아동, 장애, 성별에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축하고 개선하며 모두에게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4.b 2020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의 직업훈련, ICT, 기술, 공업, 과학 분야 등을 포함하여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아프리카 국가에 전달되는 장학금을 전 세계적으로 x% 수준까지 확대한다.

4.c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의 교원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x% 수준으로 확대한다.

**목표(안) 5.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5.1 모든 곳에서 여성·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한다.

5.2 공적 및 사적인 공간에서의 여성·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와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한다.

5.3 조혼, 강제 결혼, 여성할례 등 모든 유해한 관행을 근절한다.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공유 등을 제공하여 무급 돌봄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5.6 세계인구개발회의(ICPD) 실천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검토회의에서의 결과문서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성 및 생식보건,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5.a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자산 소유권과 통제권, 금융서비스, 유산,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국법에 따라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개혁을 시행한다.

5.b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가능한 기술, 특히 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여아의 권리증진이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 및 강화한다.

**목표(안) 6.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6.1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해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달성한다.

6.2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동등한 위생(sanitation and hygiene)에의 접근을 달성하며 야외배변을 근절,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계층의 필요에 주목한다.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쓰레기 투기 근절, 유독성 물질 배출의 최소화, 오·폐수 방출을 절반으로 감소, 전 세계 재활용 및 재사용을 x%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질을 개선한다.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의 용수 효율을 대폭 확대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담수의 추출과 공급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인구의 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6.5 2030년까지 적절한 국가간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대수층, 호수 등 물과 관련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6.a 2030년까지 집수기술, 담수화기술, 오·폐수 관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과 같이 개도국의 식수·위생 관련 활동과 사업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6.b 식수·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목표(안) 7.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신식(modern)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7.1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적정가격의 신뢰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7.2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대폭 늘린다.

7.3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속도를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

7.a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선진화되고 친환경적인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킨다.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한다.

**목표(안) 8. 지속적·포괄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시킨다**

8.1 국가적 상황에 따라 1인당 소득증가를 유지시키며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 GDP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한다.

8.2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등 산업다양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

8.3 생산적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중심 정책을 증진시킨다.

8.4 2030년내 전 세계 소비와 생산의 자원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10년 계획 프레임워크(10 year framework of programmes)에 따라 경제성장과 환경황폐화 및 자원사용 간의 상관관계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8.5 2030년까지 모든 여성, 남성, 장애인 및 청년을 포함,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8.6 2020년까지 실업, 교육, 훈련의 상태가 아닌 (NEET)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8.7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법적으로 금지 및 근절하고, 강제노동을 근절하며, 2025년까지 소년병 징집 및 동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한다.

8.8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 불안정한 직업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상품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8.10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8.a 최빈국 통합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개도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을 확대한다.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세계 전략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ILO(국제노동기구)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한다.

**목표(안) 9.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9.1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동등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간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신뢰 가능한, 안전한, 지속 가능한, 복원력이 뛰어난 사회기반시설(대륙차원의 또는 국가간 시설 포함)을 구축한다.

9.2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최빈국에서의 공업을 두 배로 늘리는 등 국가상황에 맞춰 공업이 고용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늘린다.

9.3 특히 개도국에서의 제조 및 타 부문 중소기업이 적정가격 수준의 신용 및 가치사슬과 시장과의 통합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9.4 2030년까지 사회기반시설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업을 만들기 위해 국가의 역량에 따라 청정기술 및 환경친화적 공정을 산업에 적용하고 자원사용효율을 개선한다.

9.5 과학연구를 확대하고 공업 부문의 기술적 역량을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인구 100만명 당 R&D 연구원의 비율을 최소 x%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민간부문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을 장려한다.

9.a 최빈국, 아프리카국가, 내륙중계개발도상국가, 군소도서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재정, 기술,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하며 복원력이 뛰어난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한다.

9.b 최적의 정책적 환경을 보장하여 특별히 산업 다양화와 가치부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도국에서의 기술개발, 연구, 혁신 확대를 지원한다.

9.c 최빈국의 ICT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고 2020년까지 적정가격에 보편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 **목표(안) 10.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10.1 2030년내로 소득분배에서 하위 40%에 해당하는 인구의 소득을 국가 전체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함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제거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규, 정책, 행동을 확대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한다.

10.4 재정, 임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과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큰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0.5 세계적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관련 규제의 이행을 강화한다.

10.6 경제 및 금융관련 국제기구 내 의사결정에서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확대하여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적법성이 보장되는 제도가 구성되도록 한다.

10.7 이주정책 계획을 이행하고 세심히 관리하여 정연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a WTO 협정에 따라서 개도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차별 대우의 원칙을 이행한다.

10.b ODA 및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기타 재정적 흐름이 가장 필요가 많은 국가 즉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발도상국가 및 내륙중계개발도상국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수혜국의 계획과 사업에 부합되도록 한다.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의 거래비용을 3%미만으로 줄이며 5%이상의 비용이 청구되는 송금 통로 (remittance corridor)를 제거한다.

**목표(안) 11. 포괄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지를 조성한다.**

11.1 2030년까지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촌을 개선한다.

11.2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도로 안전을 개선하며,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11.3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모든 국가에서 인간정주지역의 계획과 관리가 통합적, 참여적,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11.4 세계의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11.5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 2030년까지 물로 인한 재해를 포함,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피해인구를 크게 줄이고 GDP대비 경제적 손해를 y%만큼 낮춘다.

11.6 2030년까지 도시 인구당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을 개선하며 특히 공기질, 도시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11.7 2030년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한 친환경적 공공 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및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도시, 외곽지역간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관성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한다.

11.b 2020년까지 포용적 사회, 자원 사용효율 개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피해 최소화,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관련한 통합적 정책과 계획을 채택 및 이행하는 도시와 인간정주지역의 수를 x%

수준으로 증가시키며 효고 프레임워크(Hyogo Framework)와 일치하는 통합재난위기관리 제도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11.c 최빈국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여 현지의 내용물과 자재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복원력이 뛰어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안) 12.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패턴을 보장한다.**

12.1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10년 계획 프레임워크 프로그램(10YFP)을 이행하고 선진국이 우선 이행하고 개도국은 발전상황과 역량에 따르는 등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효과적 사용을 달성한다.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생산 및 식품 공급망, 출하 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절반으로 줄인다.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관리를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에의 유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인다.

12.6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적용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담아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2.7 2030년까지 국가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관행을 확대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한 관련 정보를 갖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2.a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구축을 위한 개도국의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12.b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 문화와 제품을 증진시키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c 낭비적 사용을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정상화한다. 국가 상황에 따라서 조세 제도의 개편이나 비정상적인 보조금을 상쇄하는 제도를 통해 시장 왜곡을 제거하고, 개도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완전히 고려하며 빈곤층과 관련 지역사회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석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한다.

**목표(안)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한다\***

*\*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주로 담당하는 국제적 정부간 포럼임을 인지하고 있다.*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와 관련한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13.2 기후변화예의 적응력 및 완화 방안을 국가 정책, 전략, 계획에 통합한다.

13.3 기후변화 완화, 피해 최소화, 적응, 조기경보 등에 관한 교육, 대중인지제고, 개인 및 제도적 역량강화를 확대한다.

13.a 기후변화 완화 행동과 이행의 투명성과 관련한 개도국의 필요를 위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공동으로 매년 1,000억 달러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2020년까지 완전히 이행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자금 집결을 통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완전한 운영을 시작한다.

13.b 여성, 청년, 지역사회 및 소외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하여 최빈국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계획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제도를 증진시킨다.

**목표(안) 14.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한다.**

14.1 2025년까지 모든 해양오염과 특히 육지활동으로 인한 오염 및 해양폐기물, 영양분 오염 등을 예방하고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

14.2 2020년까지 상당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복원력 강화를 포함하여 해양/연안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해양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문제해결에 나선다.

14.4 2020년까지 어류수확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조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및 파괴적 어업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달성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류자원이 최대한 지속 가능한 산출량 수준으로 복원되도록 과학기반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14.5 2020년까지 최신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최소한 10%의 해안 및 해양 영역을 보존한다.

14.6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에 기여하는 어업보조금의 일부를 금지하고, 불법조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제거하며,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차별 대우가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유사한 유형의 보조금 도입을 방지한다.

14.7 2030년까지 어류, 양식, 관광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함으로써 군소제도개도국 및 최빈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

14.a 군소제도개도국 및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발전에 해양 생물다양성의 영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적 지식을 확대하고, 연구 시설 및 역량을 개발하며,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의 기준과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14.b 소규모 어업 종사자가 해양자원과 시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4.c 해양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기존의 지역적, 국제적 협약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유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국제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한다.

**목표(안) 15. 육지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을 증진시키며, 지속 가능한 삼림을 위해 관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며, 토지황폐화를 중지 및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

15.1 2020년까지 삼림, 습지, 산악지역, 건조지 등을 포함,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 서비스의 보존, 복원, 지속 가능한 활용을 국제협약 상 의무에 의거하여 보장한다.

15.2 2020년까지 모든 유형의 삼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이행하고, 삼림벌채를 중단하며, 삼림황폐화를 복원하며, 조림과 재식림을 전 세계적으로 x% 확대한다.

15.3 202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나 가뭄으로 영향을 받는 토지를 포함한 모든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며, 토지황폐화가 전무한 세계를 달성한다.

15.4 2030년까지 산 생태계 보존 및 생물다양성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을 확보한다.

15.5 자연 서식지 황폐화를 줄일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취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 생물의 멸종을 예방 및 보호한다.

15.6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하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적절하게 보장한다.

15.7 2030년까지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렵을 근절하며 불법 야생동물 상품의 수요 및 공급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의 확산을 예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영향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

15.9 2020년까지 국가계획 및 지역별 계획, 개발과정, 빈곤감소전략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하고 반영한다.

15.a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모든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동원한다.

15.b 지속 가능한 삼림관리에 대한 재원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자원을 동원하고 개도국이 지속 가능한 삼림관리(보존 및 재식림을 포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

15.c 지속 가능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의 포획과 불법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한다.

**목표(안) 16.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증진시키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제공하고,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괄적인 제도를 확립한다.**

16.1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을 대폭 감소시킨다.

16.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 모든 형태 폭력 및 고문을 근절한다.

16.3 국내·국제적으로 법의 지배를 증진시키며 모두에게 동등한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16.4 2030년까지 불법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축소시키며, 불법취득자산의 몰수와 압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발생을 방지한다.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성, 책무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를 확립한다.

16.7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괄적, 참여적, 대표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의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6.9 2030년까지 출생신고를 포함,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을 제공한다.

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의거하여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 자유를 보호한다.

16.a 개도국을 포함, 국제협력 등으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폭력예방, 테러 및 범죄 방지가 가능 하도록 국가기관을 강화한다.

16.b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시키고 강화한다.

**목표(안) 17.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한다.**

**재원**

17.1 세금 및 국가소득 확보를 위한 국가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포함, 국내 자원 동원능력을 강화한다.

17.2 선진국은 국민총소득(GNI)의 0.7%에 해당하는 규모를 개도국에, 이중 0.15%~0.2%에 해당하는 규모를 최빈국에 대한 ODA로 사용하겠다는 약정을 완전히 이행한다.

17.3 다양한 출처의 개도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동원한다.

17.4 부채조달, 부채경감, 부채재조정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조정을 통해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외채과다빈곤국(HIPC)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외채문제를 해결한다.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기술**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북남협력, 남남협력, 삼자협력 및 지역·국제협력을 증진시키며 UN 수준 및 국제사회의 공조나 기술발전촉진 메커니즘 등을 활용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지식공유를 확대한다.

17.7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청정기술 및 친환경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활용을 증진시킨다.

17.8 최빈국을 위해 기술은행과 과학·기술·혁신(STI)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2018년까지 완전히 운용하며 ICT 기술의 활용을 증진시킨다.

**역량강화**

17.9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행에 대한 국가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도국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역량강화를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북남협력, 남남협력, 삼자협력 등으로 확대한다.

## **무역**

17.10 도하개발의제의 최종협상의 결과를 포함하여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공평한 WTO 산하 다자무역제도를 증진시킨다.

17.11 2020년까지 최빈국의 무역 비중을 두 배로 늘리는 등 국제무역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크게 확대한다.

17.12 WTO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최빈국의 발전을 위해 관세와 할당량이 없는 시장접근을 적시적으로 이행하며 최빈국 원산지과 관련한 특혜가 투명하고 단순하게 적용되므로 시장접근성 촉진에 기여한다.

## **제도적 측면**

###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17.13 정책조정과 정책일관성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보장한다.

17.14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17.15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각국의 정책공간(policy space)과 주도권을 존중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17.16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이 동원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파트너십으로 보완한다.

17.17 파트너십 구축의 경험과 전략을 토대로 공공부문, 민관협력,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증진시킨다.

###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

17.18 2020년까지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춰 모든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양질의, 시기 적절한, 세분화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및 국가상황과 관련된 속성 등에 따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크게 확대한다.

17.19 2030년까지 GDP를 보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발전현황에 대한 측정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더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